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복잡한 정치적 과정과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의회가 의결한 2개법안, 즉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와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의 각각에 지난 3월 23일과 3월 30일에 서명함으로써 주요 선거공약이었던 의료개혁정책의 내용과 추진전략을 법제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제 미국 의료보장체계는 대대적 개혁을 향하여 출발한 셈인데, 이와 같은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의료보장제도를 갖고 있지 못한 유일한 나라이다. 2007년에 국민의 15.3%인 약 4,500만 명이 어떤 종류의 의료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개인 파산의 약 62%에서는 의료비로 인한 부채가 원인의 일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의료비는 GDP의 16%에 달하여 다른 OECD국가들이 모두 11% 이하인데 비해서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수준이나 의료이용의 적절성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 및 의료에 관한 문제의식은 학계, 정치계, 재계를 비롯한 미국 사회의 각 분야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혁을 위한 논의는 물론이고 실천적 접근도 적지 않았으나 국가적 제도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래 시도된 근원적 개혁 구상으로는 클린턴 정부의 1993년 계획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법제화 단계에서 좌절됐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정책은 일단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 것만으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 의료체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문제가 많은 만큼 다각적 연구와 논의가 오랜 동안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결과의 많은 부분이 개혁계획에 반영됐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하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과제에 관한 실천적 체험과 그 해결을 위한 분석은 미국 의료체계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일반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의 설계와 전략을 이해하고, 추진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일은 다른 나라의 형편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나 관심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학습도 될 것이다.

미국은 국민의료비의 증가 억제, 의료보장 적용인구와 범위의 확대 및 의료의 질적 향상을 개혁의 주요 목표로 추구할 것인바, 이것은 우리의 정책목표이기도 하므로 미국의 의료개혁은 앞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교훈을 적지 않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런데 미국사회는 매우 다원적이고 정부 형태와 입법과정 등이 우리와 달라서 미국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보통인데다, 오바마의 의료개혁계획은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고 방대하므로 피상적 관찰로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정책동향」에 게재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각에서일 것이며, 따라서 매우 바람직하고 적절한 기획이라고 생각된다.

한림대학교 명예 교수 **한달선**